

“금속산별 최저임금 등 요구 전폭 수용 기대한다”

2차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전환 제도 활용 시 노조와 논의·합의하자”

금속노조가 대전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통일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설명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2차 교섭에서 올해 요구안을 설명한다. 예년보다 요구안이 많지 않다”라고 전제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물가인상 국면에서 사측이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에 우려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사측보다 더 어려움 겪을 수 있다”라며 “진지하게 고민해서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의 요구안 설명을 경청하겠다”라면서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을 마치고 요구안 분석과 제시안 마련, 노사공동위원 선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라면서 지혜를 모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요구, ‘전환 지원제도 활용 시 노조와 합의’

이어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통일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설명했다.

노조 첫 번째 통일요구는 금속산별협약 57조(산업전환대응) 5항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신설이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금속 노사가 합의한 산업전환협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충남이나 전북 등 지역에서 산업전환협약을 만들어낸 힘을 바탕으로 지자체 역할 끌어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노조는 산업전환협약 성과를 좀 더 키워서 노사가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라면서 “노

조가 요구하는 5항 신설 요구도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 지자체 지원제도와 기활법 활용 신산업 진출 시 노조와 충분히 논의 없이 일방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노사관계 리스크를 키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상민 실장은 “노조는 회사 계획이 산업전환협약에 담은 정의로는 방향에 부합한다면 적극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 두 번째 통일요구는 금속산별협약 31조(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 신설이다.

요구안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

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심의·의결한다. 3. 본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회사는 위험성 평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측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이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산별 협약 31조 위험성 평가 네 개 조항을 구체화하는 수준의 요구에 불과하다”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상민 실장은 “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기 혹은 수시로 구체화해서 위험성 평가를 명시한 게 요구안 1, 2항이다, 3항은 노사 합의로 정하라는 조항을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4항은 회의 참석시간, 활동 시간 보장 현행 조항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명확하게 바꾸자는 안에 불과하다. 사측이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계속해서 중앙교섭 요구를 설명했다.

노조 첫 번째 중앙교섭 요구는

금속산별협약 20조(금속산업 최저임금) 개정이다. 요구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등이다.

중앙교섭 요구, 금속 최저임금 10,250원

김상민 실장은 “최저임금인상 요구액 수준은 노조 기본급 인상요구안인 142,300원 정액인상과 연동했다”라며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저임금 미조직 금속노동자 보호와 노조 내 임금 격차 축소에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물가 상승률 전망, 지난해 실질 임금 하락 만회 분을 적용해서 금속사업장 월 고정급을 6.2%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냈고, 이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인상 요구액을 산출했다.

노조 두 번째 중앙교섭 요구는 금속산별협약 42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 신설이다.

요구안은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개정)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신설)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 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김상민 실장은 “이 요구도 현행 금속산별협약을 개정하지는 요구다”라며 “첫째, 보호 대상을 법적으로 보다 좀 분명히 해보자라는 요구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김 실장은 1항을 중대재해 처벌법 4조처럼 사업주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미치는 장소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로 보는 해석을 준용해서 개정하고자 제안했다. 2차 사내하청과 같이 사용자가 용역 계약의 주체가 아닌 경우도 보호 대상에 분명하게 포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행 조항이 비정규직 조합 활동에 대해 고용문제를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금하고 있지만,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 사용 편의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보자는 취지로 2개 항을 요구한다”라며 요구안 설명을 마쳤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요구안 설명 들으면서 금속 노사가 중앙교섭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자체 분석 상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잘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조는 전환기를 맞이해서 주로 대정부 요구를 하고, 사용자 측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자”라고 당부했다.